

민주 “민생회복 골든타임”...국힘 “효과 한두 달 불과”

여야, ‘소비쿠폰’ 지급 놓고 공방 興 “세계적 경기침체 대응 방식” 野 “지자체 부담 재정 파탄 우려” 행안부 경찰국 폐지 두고도 충돌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

제 등의 인화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행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조세연구원에서 등에서 이미 코로나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자료가 있다”며 “소비진작 효과는 한두 달 정도이고 재정수수는 0.2가 조금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

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20%로 규정해 지방 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설치한 경찰국 폐지를 두고도 충돌했다.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 전반의 인사를 관장하도록 하는 기구로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됐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경찰국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론하며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송 장관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농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유 직무대행은 경찰국 설립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은) 경찰국 폐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힘으로 찍어 눌러서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니 명시적으로 반대를 못 한 것”이라며 “저희가 경찰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여야, 예결위 추경 종합질의 이틀로 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됐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측은 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했다며,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하루가 아닌 이틀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추경 ‘졸속 심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단채로 퇴장해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안도결 “2차 추경은 골목·지역경제 긴급수혈 조치”

안도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30일 2차 추경에 대해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수혈조치이자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고 질식상태에 빠진 골목·지역경제를 구조하는 인공호흡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경제 회복의 기초체력 복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제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 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내란특검, 오늘尹 출석불응시 이번 주중 재통보

尹측 “3일 이후로 연기” 의견서 특검 “재차 불응시 형소법 조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30일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의

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1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특검팀에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일을 오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등 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

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연합뉴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오월정신 헌법 전문 명시해야”

수목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데 뜻을 모았다.

전라남도의회는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제출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의회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제8차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제주 4·3이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처럼, 5·18도 특별법 제정과 국가기념

일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헌법 전문에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은 특정 지역과 정파를 넘어선 국민적 공감대이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헌법 개정에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8월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돼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민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 추진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경제난 가중 지역경제 배려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책위는 밝혔다.

정책위는 “이날부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오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